

충남리포트 제241호

ChungNam Report

2016. 10. 6.

충청남도 소득격차 원인과 개선방안

김철희 · 최지민 · 홍일표
(재)더미래연구소 연구원, themirae2030@gmail.com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소득격차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격차 구조를 파악하고, 그 구조적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요 약

CONTENTS

〈요약〉

1. 사회적 격차 해소의 필요성
2. 충청남도 소득 격차구조의 현황과 특징
3. 사회적 격차구조 개선을 위한 충남도의 대응
4. 향후 정책과제 제안

- 본 연구는 충청남도 소득격차의 현황과 특징, 원인을 살피기 위해 경제 활동인구조사, 충남사회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에 따르면 충남도의 소득격차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산업별, 종사상 지위, 성별, 교육수준, 연령, 거주지 등 구조적 요인들이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근로자의 정규직 여부가 소득격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됨
 - 2015년에는 원하청 구조, 조직의 성과급 도입 여부, 조직 재무 건전성의 영향력 증대
- 정규직 여부 다음의 소득 격차 요인은 남녀 성별 요인과 교육 수준 요인임
- 반면 산업유형 요인과 거주지 요인은 소득격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충남도의 소득격차 완화에 충남의 불평등 해소 대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예방과 대응 측면에서 각 실국별 대책들을 분석·평가하고, 노사 민정협의회에 대해서도 살펴봄
- 정책적 제안으로 불평등 감지체계의 구축, 역내 사회적 대화 및 기존 교섭체계의 개선, 차별해소를 위한 통합지원체제 구축 및 재분배정책 강화 등을 제안함

사회적 격차 해소의 필요성 ◀

01

-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격차 또는 양극화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기 시작함. 특히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이 다시 점화되고 수많은 사회문제의 근간에 불평등과 격차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음
-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의 제약을 초래하여 이른바 ‘격차의 구조화’, ‘빈곤의 고착화’, ‘성장동력의 소진’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 특히 도농간 산업구조와 지역별 인구구성이 이질적인 충남도에서 양극화 문제는 중요한 정책적 이슈일 수밖에 없음
- 충남의 사회적 격차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생산격차가 아니라 소득 격차를 살펴야 함.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사회적 격차구조를 소득격차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를 유발하는 구조적 측면의 영향력을 규명할 것임
- 소득격차의 발생 원인을 고용계약 구조 차원에서 접근하고, 산업별, 종사자의 지위별, 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으로 분석해 충남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함
- 타일지수(Theil Index)¹⁾를 소득불평등 수준을 제시하는 지수로 삼아 충남의 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 분석함. 이를 위해 2010~2015년을 시간적 범위로 삼아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주로 활용했음

1) 타일지수(Theil Index)¹⁾는 Theil(1967)에 의해 개발된 경제적 불평등 지수임. 횡단적으로 관찰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자료를 엔트로피(entropy) 개념을 활용하여 불평등을 측정함. 이 지수의 최대값은 1이며 값이 클수록 불평등이 높다는 의미임

▶ 충청남도 소득 격차구조의 현황과 특징

- 지난 10년간(2005~2014년) 충남의 경제력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같은 기간 동안 지역내 총생산은 거의 2배 가까이 증대함. 이러한 성장은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산업집적화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외부주도형 경제성장은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야기함
 - 지역 내 생산격차와 지역 주민들의 소득격차가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타일지수와 지니계수를 분석해 본 결과 충청남도 내 근로자들의 소득격차는 비교적 높은 불평등 수준을 보였으나, 2011년을 기점으로 소득불평등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충청남도 내 근로자들의 소득격차를 발생시킨 구조적 요인들을 분석해 본 결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즉 정규직 여부가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커서 2014년까지는 임금격차의 25% 이상을 종사상 지위가 설명하였음
 -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영향력의 정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요인 역시 종사상 지위요인이었음. 이를 통해 고용차별 관련 정책들의 효과성이 일정 정도 확인된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음
 - 산업, 성별, 교육, 연령, 거주지 요인 등 다른 구조적 요인들의 경우에도 영향력이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조적 요인 자체의 영향력보다 구조 내부에서 발생하는 요인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시사
 - 특히 2015년도는 원하청 구조, 조직의 성과급 도입 여부, 조직 재무건전성 등의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해석됨

[표 1] 타일지수 및 요인별 격차 영향력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년도별 타일지수	0.248	0.320	0.298	0.281	0.216	0.326
산업요인	2.823	4.688	3.691	4.270	4.630	3.374
종사상 지위요인	27.016	29.375	28.523	27.402	25.463	13.804
성별요인	16.532	15.625	15.436	16.014	18.519	10.429
교육요인	13.306	14.375	12.081	13.879	16.204	10.736
연령요인	11.694	13.438	13.423	13.167	13.889	7.669
거주지 요인	0.806	2.188	1.342	1.779	2.315	1.534

- 산업유형이 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4% 남짓한 수준으로 큰 설명력을 갖지 못함을 알 수 있음. 그리고 발생한 불평등 또한 산업유형간 보다 산업유형 내의 세부 사업체 특징, 경력, 연령 등의 요인에 인한 것으로 확인됨
- 전체 소득 불평등에서 성별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특히 저임금계층의 소득개선이 이뤄졌던 2015년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음.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개선 효과는 여성에게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교육수준이 지역 내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13~16%로 적지 않음. 다른 요인에 비해 개인의 후천적 노력에 의한 변화여부가 크므로 소득격차완화의 정책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연령의 불평등 영향력 비율이 2015년에 들어 낮아진 것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10대 근로자 소득격차 개선 때문으로 추정. 60세 이상 고령자의 높은 소득격차 문제는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거주지역의 차이가 충남도의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 이는 사업장과 거주지의 분리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임

1. 충남도의 사회적 격차구조 개선 노력

- 현재 충남도는 「도민행복으로 직결되는 도정」, 「인권·양성평등 관점의 도정」을 도정의 핵심 운영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경제산업실, 자치행정국, 건설교통국, 여성가족정책관실 등의 실국에서 각각 불평등 대응과제를 실행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지역 내 일자리의 양적 측면은 양호하나 지역 내 노동시장이 원-하청 중심의 산업구조, 비정규직 및 불법파견의 확대, 산업안전 및 노동건강권 문제, 장시간 근로, 노사 갈등 장기화, 이주노동자 증가, 낮은 노동조합 가입율 및 단협적용률 등의 영향을 받아 고용의 질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 충남도에서는 「충남인권선언문」(2014)에 근거해 2016년 4월 「노동정책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집행하고 있음.
 -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기업경쟁력 제고와 역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다시 일자리를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집중
- 실국별 대응 이외에 실무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토록 하거나 노사갈등 및 노동관련 연구·조사기능 강화를 위한 도 노동전담사무국 운영, 2009년부터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음
 - 특히 충남도가 추진중인 지역노사민정협의체 구성 계획은 협치를 통한 노동의제 관리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만함

2. 불평등 해소 정책의 평가

● 충남도가 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불평등 해소 정책은 크게 ‘예방정책’과 ‘대응정책’으로 구분해 평가해 볼 수 있음.

● 예방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로 분류가능

- 첫째, 근로자, 공무원, 고용지원사업 참여 노동교육 및 소상공인·영세사업주 노동인식 개선교육. 그러나 이러한 교육체계구축은 아직 기초 수준이라는 점, 국내법 적용기준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충남도 독자적인 불평등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교육할 필요
- 둘째, 노동행정 역량강화 및 실행력 확보. 아직 초기적 사업으로 향후 도내 노동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구체화할 때 명확한 평가 가능
- 셋째, 노동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도의 자체적 노동지표 개발은 불평등 이슈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 다만 아직은 구체적 지표개발 단계는 아님
- 넷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및 공공부문 노사정협의회 운영. 최근 중앙정부 차원의 대화가 경색국면인 상황에서 지방정부 주도 대화채널 확대는 의미가 큼
- 다섯째,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사업 재원을 지방정부가 자체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치밀한 계획수립이 필요
- 여섯째, 노사갈등 이해당사자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및 노동정책 거버넌스 구축. 최근 충남도 내 악성분쟁사업장이 늘고 하청노동 문제와 단일사업장 내 노사갈등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임

● 대응정책 역시 다음의 여섯 가지로 분류가 가능할 것임

- 첫째, 충남형 유스개런티(청년보장) 추진.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보장 프로그램 추진은 지역의 노동시장 특수성과 지역의 산업발전계획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 가능
- 둘째, 건설분야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 및 지급보증제도 정착. 최근 브로커들이 개입해 수입을 빼감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직접적 감독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개입은 매우 긍정적 정책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셋째, 비정규직근로자 생활임금제 및 공무원직전환(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추진. 충남도는 2015년 12월 30일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 2017년부터 지급할 계획임. 이는 공공부문부터 실질적 임금보장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하지만 관련 제도들의 설계 및 계획수립을 더욱 치밀하게 해야 함

- 넷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특수고용직 처우개선. 소득불평등 문제 개선에 효과가 클 것이나 그만큼 충분하고 빠르게 개선이 이뤄질 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차별해소 및 근로환경 개선. 충남도 고용 기간제 처우개선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처우개선 추진. 그런데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준수해야할 차별금지 의무기준 이하에서 개선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정책구사가 필요
- 여섯째, 동일노동·동일임금 제도기반 구축과 적극적 노동복지. 도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민간으로 확대계획. 민간기업 비정규직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비정규직 생활보장체계 강화할 예정. 그러나 세부적 접근 않으면 자칫 구호에 그칠 수 있음

● 충남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불평등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나 관련 행정력과 경험 모두 충분하지 않은 실정

- 인권위원회 사무소 설치 업무와 연계해 여성노동권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남녀 간 차별요소의 선제적 해소 노력 매우 중요. 청소년과 고령자 등도 함께 적극적인 노동보호 조치 기획 필요
- 대부분의 계획수립과 이행이 임의적 협의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

● 소득 격차구조 분석을 통한 각 요인별 정책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음

[표 2] 소득격차 유발 요인별 대응방안

유발요인	구체적 대응 방안
산업별	· 산업구조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숙고가 필요 · 저소득 종사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업종의 파악과 이들 종사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
종사상 지위별	· 산업유형별 소득격차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적 고용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 비정규직 종사자 구성이 높은 서비스업 양산은 지양 · 기본소득의 보장
성별	· 노동시장 진입 전후에 발생하는 차별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더불어 적극적 훈련개선조치 도입을 적극 검토
교육 수준별	· 노동시장 전후에 발생하는 차별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
연령별	· 과도하게 역진적인 세금환급 제도의 정비를 통한 조세누진성 강화 · 직접적인 사회수혜금 재원확보를 통한 청년 및 고령층 지원 · 근로능력이 없는 가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기본소득 제공)
거주지별	· 지역 소재 기업들의 지역 청년고용제 내실화

1. 불평등 감지체계의 구축

-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등이라는 이슈가 향후 도정의 중요한 위치에 놓이도록 하는 것이 우선임.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상황을 빠르게 확인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해 대응책을 마련해 가는 것임
- 현재의 도정 시스템 내에 불평등 감지체계를 두어 통계적 방식, 인지방식, 유관기관과의 협조, 민관협치체계의 활용 등을 통해 불평등 이슈를 발굴하고, 이런 문제점이 지역 내에서 혹은 국내에서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함

2. 역내 사회적 대화 및 기존 교섭체계의 개선

- 현재 충남도의 노사민정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앙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계에서 보듯 참여주체, 관련의제, 집행력 등에서 한계가 지적됨
- 한편 유럽의 다른 국가 사례나 국내의 변화양상에서도 중앙집중적 교섭체계가 힘을 잃어 가면서 교섭력이 약한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의 소득분배가 불균형적으로 형성되는 모습도 나타남

- 그런 면에서 충청남도 차원에서 첫째, 노사민정위원회의 참여주체를 질적·양적 측면에서 확대해 다양한 주체들, 예를 들어 사회적 경제 주체들, 자영업자, 경제적으로 중앙과 연계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점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하고, 관련제도도 노동의제를 넘어 공정거래, 산업정책, 재정정책의 영역까지 포함하는 조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함
- 둘째, 임금교섭체계는 현행법 상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이를 다시 중앙집중화 시키기 위해선 법 개정이 요구되는 부분임
 - 다만 현재 충청남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생활임금이나 적정임금제도를 공공부문에 한정하지 말고 민간을 포함해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국가직무표준(NCS)²⁾을 연계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3. 차별해소를 위한 통합지원체제 구축 및 재분배정책 강화

- 충남도정 차원에서 노동시장에 널리 퍼져있는 차별과 재분배기능의 약화를 해결할 대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 현재 중앙정부가 운영중인 차별해소제도나 장애인차별, 남녀고용차별, 고령자 차별, 비정규직 차별과 같이 영역을 분할한 시스템으로는 적극적인 차별해소가 사실상 불가능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차별해소와 관련된 통합지원체제를 만들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강력한 보호행정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임
- 청년수당을 비롯한 재분배 제도의 치밀한 설계가 필요. 현재 중앙정부가 시행중인 청년희망펀드와 같은 수준을 넘어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들의 초과이익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향후 충남 지역에서 예상되는 정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

2) 직무와 관련되어 직업훈련, 직무개발, 임금결정 등에 사용가능한 체계. 이를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측정하고 임금을 주는데 사용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첫째, 충청남도 차원의 차별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최근 미국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ATAA (Alternative Trade Adjustment Assistance)³⁾와 같은 방식을 구조조정 및 기술개발에 의한 인력구조조정까지 확대해 운영하는 방식이나 비정규직, 청년근로자, 여성근로자 등 취약노동계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김 철 희 연구원

(재)더미래연구소

02-785-2030, themirae2030@gmail.com

최 지 민 연구원

(재)더미래연구소

홍 일 표 사무처장

(재)더미래연구소

※ 본 리포트는 2016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충청남도의 사회적 격차구조 연구 : 소득격차 구조에 대한 이해와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요약한 것임.

3) 이 제도는 원래 1995년 캐나다에서 실시된 'Earnings Supplement Project'에 기초해 Robert Litan과 Lori Kletzer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시작. 2001년 미국 노동부는 이 개념을 받아들여 ATAA(Alternativ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Older Workers)를 설계. ATAA프로그램은 50세 이상의 해고노동자로 연소득 5만불 미만의 급여를 받거나 해고된 후 26주 이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급여와 새 급여 간 차액의 절반에 대해 최대 1만불, 최장 2년까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임. 이 제도는 다이애나 파렐(Diana Farrell,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의 제안에 의해 최근 재조명 받고 있음. 그녀는 역외이주 기업으로 인한 실업뿐만 아니라 최근 나타나는 기술 진보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 그녀는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이 역외조달로 인해 얻은 이익의 4~5%만 투입해도 기업의 역외조달에 따라 발생한 실업자 임금차액의 70%보전과 최장 2년까지의 의료보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전체 실업자들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이 주장은 올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인용되면서 정책적 추진력을 얻고 있음

◆ 참고 자료 ◆

국가지표체계 (2016). 소득 분배(Gini계수)변화 추이.

김성제·최상희·윤정란. (2008). 지역별 양극화와 자산소득 시계열적 변화와 소득항목별 영향력.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박완규. (2010).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에 대한 분석-GRDP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지역연구」,
26(4): 75-101.

반정호. (2010). 고용구조 변화와 임금불평등: 종사상지위를 중심으로. 「노동리뷰」, 49-62.

충청남도. (2016).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충남넷

_____. (2016). 충청남도 노동정책기본계획(안) 18개 정책분야별 50대 단위과제. 충남넷

_____. (2015). 충청남도 통계연보. 충남넷

통계청. (2015). 2014년 지역소득(잠정).

충남리포트(2016년도)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6-01	행복한 성장을 위한 꿈과 도전, 충남경제비전 2030	강현수 외 2명	2016.01.04
2016-02	공공부문 개혁 요구와 충남에 대한 시사점	김대호	2016.01.07
2016-03	민주주의 패스포트를 통한 로컬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욱 외	2016.01.14
2016-04	금강 중·하류의 물 환경 특성과 큰빛이끼벌레 서식에 따른 대응방안	정종관	2016.01.20
2016-05	충청남도 제조업 개별임지 관리방안	오용준	2016.01.28
2016-06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김용현	2016.02.04
2016-07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윤태범	2016.02.12
2016-08	충청남도 지역경제 생산성의 특징과 정책 과제	이종윤 · 임재영	2016.02.17
2016-09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	한상욱 · 임형빈	2016.02.19
2016-10	지역에너지 전환과 충남의 에너지정책 방향	여형범	2016.02.24
2016-11	충남 기초공간데이터 구축을 통한 자연마을 과소·고령 실태 분석	윤정미	2016.03.03
2016-12	충남 상생산업단지 정책의 성공전략과 추진과제	장수명 외 2명	2016.03.10
2016-13	충남 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정책지원 방안	김태연 외 2명	2016.03.17
2016-14	충남도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입지지역 지원방안	이민정	2016.03.23
2016-15	충남 중대형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현황과 발전전략	홍원표	2016.03.30
2016-16	충남형 지방재정 확충 방안	안연환 외 2명	2016.04.06
2016-17	충남 포괄적 도민안보체제 구축 방향과 과제	김창수	2016.04.14
2016-18	충남 사업장 폐기물 발생 현황과 매립지 갈등 대응 방향	장용철	2016.04.21
2016-19	충남 어촌 · 어항의 공공디자인 적용 방안	이충훈	2016.04.28
2016-20	충남 지역행복생활권 실태분석과 추진 방향	임형빈 · 한상욱	2016.05.06
2016-21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충남 버스 교통정보체계 구축 방안	김원철 · 정민영	2016.05.12
2016-22	충남 소규모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관률	2016.05.19
2016-23	충남형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 복지	김필두 · 윤준희	2016.05.27
2016-24	충남 폐염전·폐양어장 생태복원과 활용방안	장동호 · 이상진	2016.06.02
2016-25	2040년 충청남도 시·군 인구추계와 정책과제	심재현	2016.06.08
2016-26	체계적 환경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충남형 환경보건 DB 구축 필요	명형남	2016.06.17
2016-27	충남 교통SOC 현황과 정책방향 -도로, 철도 분야를 중심으로-	김형철 · 장준용	2016.06.22
2016-28	농민기본소득제, 충남도 농촌마을에서 실험하자	박경철 · 강마아	2016.06.30
2016-29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방안	박경철	2016.07.07
2016-30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지원방안	최영화	2016.07.14
2016-31	전국과 충남의 미세먼지 현황과 정책제언	명형남 · 김순태	2016.07.21
2016-32	충남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전통축제를 육성하자	이인배 외 2명	2016.07.28
2016-33	충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소상쇄 활성화 전략	표정기 · 이상신	2016.08.04
2016-34	충남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조영재	2016.08.11
2016-35	자치단체 세외수입의 문제와 개선과제	고승희	2016.08.19
2016-36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정책제언	김종화	2016.08.25
2016-37	충남 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일자리정책 과제	이상호	2016.09.02
2016-38	충남의 농자재 지원정책 개선방안	강마아	2016.09.08
2016-39	시민운동으로서 제2새마을운동 추진방향	성태규	2016.09.22
2016-40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활용을 통한 충남 에너지 전환	황순원 · 김은경	2016.09.30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